

토 론 문

강병구(인하대학교 경제학과)

-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은 정부가 보유하는 주요 재정정보와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을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
 - 재정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는 행정신뢰도 제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자체적 관리능력 제고, 참여와 협치를 통한 정부 3.0으로의 이행 촉진, 정책효율성 제고 및 재정분배 갈등 조정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확대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지만, 재정확충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와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더욱이 공공부문의 생산과정은 그 속성상 적정한 비용을 추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정투명성 저하는 각종 부조리와 비리의 원인을 제공
 - 재정지출이 낭비될 경우 도민들의 납세의식은 희박해지고 지출 대비 서비스의 질은 크게 낮아져 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짐
-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서는 시장경제에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중립적 행위자: 공공정책의 입안과 민간부문의 생산 활동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단지 주어진 정책목표를 집행하거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기능을 수행
 - 사회경제적 갈등의 조정자: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에 개입하지만, 그 역할은 시장실패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한
 - 자기이익 추구 행위자: 시장경제에서 여타의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를 활용
 - 공공서비스 생산의 비용추계가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이 자기이익을 극대

화시키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경우 재정의 낭비는 물론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 사회적 잉여의 사적 유용, 취약한 사회적 책임성 등이 발생

- 따라서 재정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
 -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비용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이용한다면, 예산 낭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McCubbins, Noll and Weingast(1987, 1989)는 의회와 관료의 관계를 주인-대리인(principle-agent)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비효율적 예산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상의 절차를 중요시¹²⁾
 - 즉, 합리적으로 마련된 행정절차를 통해 도민들은 공무원으로부터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공의 의견을 지방정부에 전달함으로써 비대칭적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임
-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재정공시제도’는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충분성의 부족,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행정전문용어의 낮은 가독성, 공시내용의 부족한 신뢰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의기능 강화와 재정성과지표의 개발 및 평가결과 공개 등도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충청남도는 2013년부터 도 홈페이지인 ‘충남넷’에 세입, 예산, 지출 및 회계 및 지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2014년부터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도내 전 시·군까지 확대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

12) McCubbins, Mathew D., Roger G. Noll, and Barry R. Weingast. 1987. "Administrative Procedures as Instruments of Political Control.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3: 243-77; McCubbins, Mathew D., Roger G. Noll, and Barry R. Weingast. 1989. Structure and Process, Political and Policy: Administrative Arrangements and the Political Control of Agencies. *Virginia Law Review* 75: 431-82.

됨

- 사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툴의 개발, 이용자의 욕구 충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효율적인 재정정보의 공개와 전달, 재정정보에 대한 가독성과 접근성의 제고 및 예산교육 강화, 재정정보 공개가 충남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등이 필요
 - 충남도가 밝힌 재정정보 공개사업의 목표 성취도 평가를 보면, 재정공시에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
 - ▶ 원가정보 공개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됨
 -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수준에 있어서는 예산수립 및 예산계획서, 회계감사, 주민의 재정부담 변동사항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됨
 - OECD의 예산투명성 기준과 비교할 때, 예산 설명에 조세지출에 대한 토론의 포함, 적절한 회계원칙 및 회계정책의 제시, 보고서에 책임공무원의 책임진술서 포함, 경제적 가정의 변화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등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이외에도 공표되는 예산의 단위, 용어설명(계약정보시스템에서 투찰률 등),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기준(50억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이 요구됨
- 한편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와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 필요
- 먼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용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공동체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8월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

었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지만, 수렴된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 참여예산제도의 성공 여부는 예산을 개방적으로 논의할 지방정부의 의지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으며, 이는 참여예산제도의 전형적인 예로 인용되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시의 경우에서 확인된 바 있음.¹³⁾ ‘도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음
- o 결론적으로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예산 낭비의 방지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증대는 물론, 건전한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치이기 때문에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13) 포르투알레그레 시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os, D. "Participatory Budgeting in Porto Alegre: Toward a Redistributive Democracy," *Politics & Society* 26, 1998. 참조.

[토론문]

재정정보공개의 국내외 경향과 간략한 사례

강성국 간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사회적 흐름과 정부 3.0

시민들은 나날이 국가 또는 정부의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매년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심의결과 국정감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 재정정보, 또는 정부의 주기적인 고지를 통해서만 입수되는 재정정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정에 관한 정보공개요구 역시 행정 일반에 대한 정보공개요구가 증가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민들은 자신이 알고자 하는 행정 일반에 대해 적극적인 요구가 존재하고 재정에 관한 정보는 특히 그 안에서 무척 강도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왜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국가론적 관점으로도 쉽게 설명이 된다.

근대 국가(modern state)의 핵심적 기능은 의회민주주의와 구성원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의 행위를 통해 국가 구성원들의 삶의 조건들을 양질화 하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익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오늘 날 많은 이들이 주지하다시피 여기서 국가가 위임받은 권력이란 흔히 국가의 결정권이나 통치권을 총칭하는 주권(sovereignty)으로 인정된다. 현대 위에 언급한 국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재원이 필요한데 재정 또한 이와 비슷한 원리로 구성된다. 국가운영의 필요경비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장과 개인으로부터 국가 구성원들로부터 조세의 형태로 조달

하는 조세국가(Steuerstaat)가 그것이다. 자본주의의 발달하며 국가의 기능과 행위는 전형적인 조세국가의 범주를 이미 크게 벗어나 있고 국가마다 조세의 부과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부분 국가 재정에서 조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주권이 국가의 구성원들로부터 발생되었듯이 오늘날 국가나 정부의 재정 역시 시민들의 사적재산의 일부를 위임받아 정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단순히 투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행정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강해진 만큼 재정에 대한 정보접근의 요구 또한 강해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민들의 정보접근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정부 또한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훨씬 수월해 졌다.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시기부터 공약으로 제시되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 3.0¹⁴⁾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그 결과물에 대해 내용적·기술적 차원의 비판지점이 많더라도 시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요구를 강하게 부응하기 위한 매우 진보적인 정책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정부 3.0 시행 이전 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의 전자정부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질 그리고 서비스의 원할 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공단 그리고 그들의 산하기관들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과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그 편차가 심했다. 그런데 정부 3.0이 추

14) 박근혜 정부는 대선시기 부터 자신들의 전자정부 및 정보공개 정책에 '정부 3.0'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정부 3.0은 특정 전형(典型)이 존재하는 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정책자원의 고유명사이다. 정부 3.0의 내용 또한 그간 정부 2.0 개념에 대한 논의를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진되면서 부터는 전자정부·정보공개 서비스에 큰 관심이 없던 기관들도 서비스를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지난해 말 부터는 각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공단들은 이 새로운 전자정부·정보공개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분주했는데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또는 정부 3.0) 카테고리를 재정비하거나 추가해서 홈페이지 메뉴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에 배치했다.

특히 각 기관들이 정부 3.0 정책 중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부분은 원문공개 서비스이다. 원문공개는 정부 3.0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중 하나로 생산된 공문서 중 대국민공개로 분류된 공문서의 원문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원문공개 서비스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디지털 토목사업에 비유¹⁵⁾하기도 하지만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최종적 결과물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정부 3.0이 추진된 후에 지방자치단체들과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들의 재정정보공개 역시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정부 3.0 이전에도 행정정보 공개의 형식과 질이 천차만별이었던 것과 같이 현재의 재정정보공개 역시 기관마다 그 방식이 통일되지는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공개 방식을 보면 주로 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메뉴에 하위 분류를 두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 ②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정보공개만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보다 많

15) 박근혜 정부는 원문공개 서비스를 정부 3.0의 핵심적인 서비스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하게 비판받고 있다. 첫 번째로 실제로 시민들에게 공문서의 원문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정보인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공문서 원문의 형태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단일 공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정보가 그리 많지도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박근혜 정부는 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모든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생산문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목록을 정보공개포털을 연동시켰는데 그 덕분에 특정 공문서를 검색할 때 실제로는 검색어를 통한 검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검색시간도 심각하게 오래 걸려서 활용도가 극단적으로 떨어진다.

은 지방자치단체들이 ①의 방식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②의 방식을 취하는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린재정”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예산실”, 대전광역시의 “대전광역시 예산·재정”이 있다. 앞으로는 ②의 방식으로 재정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전자정부가 발달하고 정보공개 범위가 넓어져 한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제공될 경우 오히려 적절하게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거나 가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②의 경우에는 이런 우려를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편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홈페이지>



<정부 3.0 이후 원문공개 서비스가 추가된 정보공개포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3. 해외사례

현재 정부 3.0을 추진하며 한국의 광역단체의 재정정보공개는 그것이 광역단체마다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채권상환, 기금운용 등 주요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므로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정보공개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공공기관 스스로의 재정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할 때 보완지점이 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보다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의 재정정보의 가공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역시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정보공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두 나라의 재정에 관한 정보는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관리예산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영국의 경우에는 재무부(HM Treasury)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¹⁶⁾. 미국과 영국 재정정보공개 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정보, 특히 시민들의 요청이 가장 많은 예결산에 관한 정보만 따로 분류해서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해 두었다는 점이다.

<백악관 홈페이지의 미국 행정관리예산국 페이지>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BLOG PHOTOS & VIDEO BRIEFING ROOM ISSUES the ADMINISTRATION the WHITE HOUSE our GOVERNMENT

Home - The Administration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earch WhiteHouse.gov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bout OMBlog The Budget Management Regulation & Information Policy Legislative Information Join OMB Contact OMB

THE BUDGET

President's Message
Mid-Session Review
The Budget
Overview
Analytical Perspectives
Historical Tables
Supplemental Materials
Appendix
OMB Contributors to the Budget
Supplementals, Amendments, and Releases
Fact Sheets
Past Budgets

The President's Budget for Fiscal Year 2015

Opportunity for All: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15 Budget

A Roadmap for Growth, Opportun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The President's Budget provides a roadmap for accelerating economic growth, expanding opportunity for all Americans, and ensuring fiscal responsibility. It invests in infrastructure, job training, preschool, and pro-work tax cuts, while reducing deficits through health, tax, and immigration reform.

Builds on Bipartisan Progress: The Budget adheres to the 2015 spending levels agreed to in the Bipartisan Budget Act and shows the choices the President would make at those levels. But it also shows how to build on this progress to realize the nation's full potential with a fully paid for \$25 billion Opportunity, Growth, and Security Initiative, split evenly between defense and non-defense priorities.

WHAT THE PRESIDENT'S BUDGET DELIVERS:

- **Stronger Growth and Job Creation:**
 - **Advanced manufacturing** -- Invests in American innovation and strengthens our manufacturing base, including a national network of 42 manufacturing institutes.
 - **Research and innovation** -- Supports ground-breaking research to fight disease, protect the environment, and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makes permanent the R&D Tax Credit.
 - **Pro-growth infrastructure** -- Lays out an ambitious, four-year \$332 billion surface transportation reauthorization proposal paid for with transition revenue from pro-growth business tax reform.
 - **Government reform** -- Promotes government management that delivers improved services that are more effective, efficient, and supportive of economic growth.

<영국 재무부 홈페이지>

16) 과거의 예결산 등 재정기록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우 미국 국립인쇄소(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영국의 경우에는 국립 기록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에서 제공하고 있다.



18 August 2014 — News story

Danny Alexander to take the case for staying in the UK to all corners of Scotland

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 will be travelling around Scotland, from east to west and north to south, visiting a range of key companies.

또한 한국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취약점이 검색기능인데 미국과 영국 두 국가는 검색기능에 충실하다. 정부포털¹⁷⁾ 검색창에서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예산을 의미하는 단어 “budget”이나 재정 또는 그와 관련되는 “finance”, “fiscal” 등을 입력하면 바로 어렵지 않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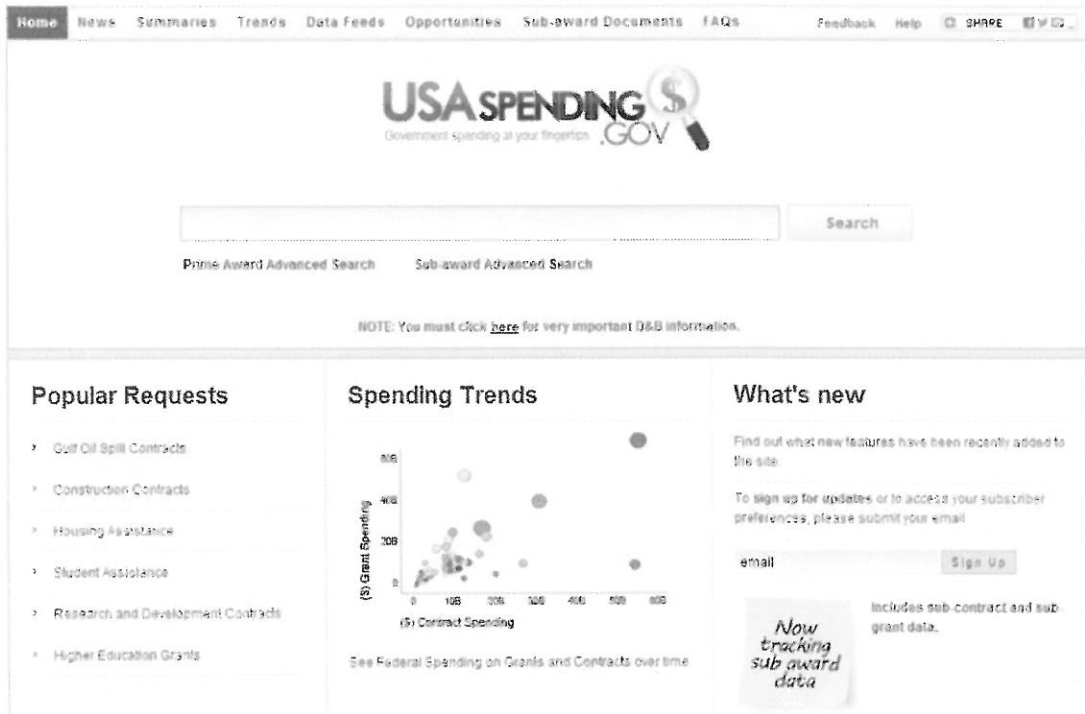
현재 미국과 영국 두 국가 모두 최근 몇 년간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3.0과 같은 전자정부 및 정보공개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대 이들 국가의 정책과 한국의 정부 3.0과 중요한 차이점은 영국과 미국은 로 데이터(raw data)와 시민들이 흥미를 느끼거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공 데이터 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미국의 연방정부재정 지출을 알려주는 정부 홈페이지 usaspending.gov 와 영국의 공공정보 포털 data.gov.uk 에서도 잘 드러난다. usaspending.gov 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데이터를 이용자가

17) 미국의 경우 [www.usa.gov], 영국의 경우에는 [www.gov.uk]로 이용이 가능하다.

자기에게 필요한 항목들만 맞춰서 열람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한 눈에 재정경향을 읽을 수 있도록 통계작업을 거쳐 여러 형태의 그래프를 제공한다.

<usaspending.gov>



현재 시범운영 중인 영국의 공공정보 포털 data.gov.uk 는 spend reports라는 재정정보공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500파운드(한화 85만원 가량)이상 지출된 정부조달지출을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항목에는 비용, 품목, 조달업체명이 모두 공개된다.

<data.gov.uk 의 spend reports>

DATA.GOV.UK ^{Beta} Opening up Government					
Home	Data	Apps	Interact	Search for data...	
Datasets	Map Search	Data Requests	Publishers	Public Roles & Salaries	Spend Reports
Spend Reports					
Dxiasets / Spend Reports					
UK DEPARTMENTAL SPEND REPORTING AS OF AUGUST 25, 2014					
Every body of the UK central government is required to report its transactional expenditure once a month. This table lists all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shows how up-to-date their spending reports are on data.gov.uk					
⚠ This report service has been launched as a public beta					
The initial intention for these reports is to allow government publishers to audit their entries on data.gov.uk and ensure all their spend transaction data is included in this report.					
Overall statistics					
41	Departments				
5 (12%)	Up-to-date				
31 (75%)	Has past data				
5 (12%)	No data				
Ministerial department					
Publisher	Status	Files	Transactions	Latest	Total (£)
Attorney General's Office (publisher page)	Has past data	published by Treasury Solicitor's Department			
Cabinet Office (publisher page)	Has past data	85	7495	30/04/2014	1706395864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publisher page)	Has past data	89	108201	31/12/2013	123844588580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publisher page)	Has past data	71	169607	31/03/2013	225479816784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publisher page)	Has past data	70	7423	12/06/2014	23546944744
Department for Education (publisher page)	Up-to-date	51	663080	30/06/2014	342434827422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publisher page)	Has past data	436	46924	04/06/2014	10192980811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ublisher page)	Has past data	50	82897	28/02/2014	23165062845

이처럼 해외의 새로운 전자정부 및 정보공개 서비스에 비추어 현재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공개 서비스를 개편한 것은 어찌 보면 기존까지 응당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아직까지 원활하게 운영하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앞서 간략하게 살펴본 미국과 영국의 경우 새롭게 가공된 재정정보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기존에 재정정보공개를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충청남도 재정정보 공개의 한계와 향후 과제

조상연 사무국장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납세자는 정책소비자이다.

납세자는 세금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정책을 산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납세는 의무사항이고 만들어진 정책의 선택권은 납세자에겐 없다. 심지어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정책의 예상가격과 예상품질도 알 수 없다.

현 재정정보공개의 한계

1)온라인 공개

실제로 행정이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현수막과 신문광고는 물론이고 심지어 순회강연에 이르기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탑재는 마치 플래시보 버튼처럼 작용하여 행정비밀주의의 면피용이다, 즉 인터넷,sns는 착시 현상으로(노인층에 대한 소외등)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분만을 얻고 실제로 정보를 알리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홈페이지의 구성을 다단계로 하는 방법, 정보공개 리스트의 포지티브방식, 용어의 난이도 조정, 인쇄만 가능한 파일 사용 등) 따라서 홈페이지만을 통한 정보의 공개는 참여가 아니라 관망을 확대하고 참여의 양극화가 일어나 도민은 참조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사후 보고용이다.

사후 비판의 용도로 사용되고 추후 교정이 되질 않는다. -비판에 대한

수용은 행정의 몫이다. 비판도 시민전체의 의견이냐는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

재정정보공개의 한계를 해소할 방안

- 오프라인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1) 예산알리기 (각종 행사와 정책에 가격표 부착운동)

예산이 낭비되는 현장에 현수막으로 그 예산의 내역을 알리는 운동이다. 충남도의 선심성이거나 보여주기 모든 축제행사와 시책에 적용할 수 있다.



무용지물 자전거도로, 둔치에 설치된 바닥분수, 하수역펌핑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삽교천추수감사제(박정희 대통령 추모제로 변질된), 박원순강연 가격표 부착, 과천시 문화원 건축비

2) 공공재 가격표 부착

지자체가 구입한 물품에 생산연도와 가격표를 부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예, 서울시의 보도블럭 생산연도 부착 사업) 이는 공공조달물품의 가격을 그 물품에 직접 부착하는 것으로 물품의 납품시에 그 납품일자와 가격을 부착하도록 한다. 소비자인 도민이 그 물품의 가격과 생산연도를 알게 함으로써 자신의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하도록 한다.

-사전정보의 공개

1) 예산편성요구서 공개와 사업요구 모집

당진시는 2004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중에 예산편성요구서의 홈페이지 게시가 시작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요구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주민의견을 모집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다.



“당진시민과 함께 열린재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 재정 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시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 참여기간 : 2013.10.14. ~ 10.25. (12일간)
- 참여대상 : 당진시민 누구나
- 공개내용 :
 - 2014년도 부서별 자체사업 예산요구서(보조사업 제외)(다운로드)
 - 시설비 등 사업예산 2천만원 이상
 -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의무적 경비 제외
- 문 의 : 당진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041) 350-3062~4
- 참여방법 : “주민의견제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주민의견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인적사항(또는 회원가입)후 파일로 첨부하여 등록

시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귀한 의견은 우리시의 2014년도 예산편성 전에 관련부서의 검토를 통해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4년도 자체사업세출예산
요구 현황 다운로드\(서식\)](#)
- [주민의견제출 서식
다운받기\(서식\)](#)
- [주민의견 신청하기](#)
- [의견신청 목록보기](#)

이용자의 책임 있는 게시를 위하여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내용, 상호비방 및 명예훼손(기관, 단체포함)등의 글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의회에 공개되는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것

예산안등의 지방의회에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공개- 직접민주주의가 기본이고 대의민주주의는 대안이다.-행정이 의회에 정보를 제출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에게 원본 그대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

3)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신청제도의 개선

민원의 신청시에 민원인에 대한 정보보호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종종 이를 행정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익명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공개 요구한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 비공개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갖도록 할 것)

(참고)

납세자 권리 찾기 “얼마예요?” 운동을 시작하며

누구나 자신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 당진군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쉽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잘 알고 있는가?

당진군은 예산서와 입찰정보 그리고 수의계약정보까지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에 서툰 노인들과 SNS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예산서를 보았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이 우리 집 앞의 공사인지 알 수 없다.

당진군민이 사업의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당진군은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예산을 사용한다. 또한 공무원은 예산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군민이 알 길이 없어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예산감시운동을 하여왔다. 200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 군민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운동을 하고 그 후 예산편성 요구서가 공개되는 시점에서 의견서를 전달하였지만 각종 이익단체에 둘러싸여있는 관료 사회를 개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낭비성 사업이라고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군민의 관심이 없는 가운데 무시되어 결국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납세자도 소비자이다. 그것도 대금을 선지불하는 고객이다. 공급자인 당진군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및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동안 당진군은 인터넷에 들어가 메뉴 몇 개를 클릭하고 여기저기 물어야 겨우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숨겨놓았다. 물건은 있는데 품질은 알 길이 없고 각각의 서비스 가격도 모르면서 당진군민은 전체 서비스 요금을 부담해 왔다. 오늘 납세자 권리 찾기 “얼마예요?”운동은 당진군민이 납세 의무자이면서 행정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운동이다.

앞으로 행정에 가격표를 붙이는 운동인 이 운동은 “가격표 만들기” 모금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당진군 전역의 모든 세금이 사용되는 현장에 소비자인 주민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부착해 나갈 것이다.

오늘 이 운동을 야 3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시작해 나가는 것도 자못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생활정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에서는 일부 정당이 할 수 있는 정책홍보의 권리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20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국민참여당 당진지역주비위원회,
민주노동당 당진군 당원협의회, 진보신당 당진군 당원협의회

<토론문> 한겨레신문사 전진식 기자

1.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자체를 모르는 도민도 상당수입니다. 또한 도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보더라도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민들에게 공개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도민들의 공개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매뉴얼도 필요합니다.
2.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는 이미 수립된 예산과 지출 명세를 볼 수 있지만, 예산수립 단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용은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과 실제 예산 수립 과정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